

국방기술 및 국제협력에 부처...



黃東準 /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경영학박사



방산업체들이 향후의 고도무기체계 개발 생산에 대처하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방부)가 우선 3,000억원 정도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대폭 탈피하여 방산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할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 東유럽의 개혁, 그리고 동서냉전체제의 소멸로 각국은 이념적, 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른 남북간 회의개최, 정부의 북방정책 그리고 세계적 新데탕트 분위기의 국내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안보의식(安保意識)이 약화 추세에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도(強度) 인식도 과거에 비하여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내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내 정치/사회의 민주화 추세 그리고 전반적인 국내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국가재정운영 형편상 국방예산의 감소편성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강대국들간의 군사위협 감소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각국도 국방비를 축소하고 군사력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무기시장 소요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주요 선진 무기공급국간에는 무기수출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989년에 세계 총 무기교역 규모는 335억불이었으나, 1990년에는 35%가 줄어든 217억불에 불과하였다.

걸프전쟁과 유럽지역의 군비협상 결과로 세계 무기시장은 잉여(剩餘)무기들이 넘치고 있으나, 실제 교역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들의 방위산업구조 재편과 국가간 방위산업 국제협력을 불가피하게 강요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문 제 의 식

요즈음 우리의 방위산업에 대하여 우려의 소리가 방산업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과거 방위산업에 관여했던 많은 분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고 있고, 전반적인 국제안보환경 개선으로 국방비가 축소됨에 따라 국내 무기소요의 감소 또는 중단으로 모든 방산업체들은 향후 방위산업 분야 투자 및 장래 사업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방위산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옴으로써 핵심적인 국내 군사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방위산업이 활성화되고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국내개발과 성능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0%의 국산화는 소요규모 및 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할때 불필요하나, 선별적인 핵심 전략품목은 집중적으로 국내개발하고,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를 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방위산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손발에 불과한 생산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조립생산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생산기반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가 주체가 되어 움직여야 되나, 우리의 경우 방산업체들은 중장기 계획이 없이 피동적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우리의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능력으로는 향후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소요 충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는 방위산업 건설 초기에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미국의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기본 병기를 국산화한 후에 새로운 연구개발 목표의 불명확, 방위산업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의 약화와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축소, 그리고 방산업체 개발능력의 결집화 미흡 등으로 '70년대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한 단계 위로 도약할수 있는 轉機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의 기술, 경제수준과 관리체제가 '70년대와는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연구개발 및 생산체제는 과거와 거의 똑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체제로 운영됨으로써,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발전이나, 퇴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방위산업의 진정한 위기는 방산업체들의 피동적인 자세와 기술개발 정체 및 기술수준의 담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기업운영 측면에서 불태 中·長期적 불확실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세계는 경제·기술전쟁 시대에 돌입하였고,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기술수준이다. 또한 군사력의 잠재역량과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생산 여부는 핵심 군사기술의 자립화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내외 안보 및 경제기술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방위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체제개편과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 지금이 適期

남북한 관계 및 동북아 주변 안보 환경을 고려할때 향후의 한반도 상황은 대결보다는 화합을 통한 협력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 5월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 무장병 침투사건 등과 같은 북한의 양면성과 일본의 PKO과전 등의 군사대국化 추세 등을 고려할때, 한반도 주변 전략안보환경은 위협과 평화가 공존하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전환기적 상황이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때 한반도에서의 주변국 위협은 상존해 왔기때문에 우리의 독자적 방위태세 준비는 지금부터 더 강화되도록 투자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과 방위력 재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대략 1992~2006년 기간중 총 1,088억불 규모의 무기체제 획득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東西 양진영의 군축분위기에서 발생한 걸프전쟁은 C'I, AWACS 등의 첨단무기체제의 중요성과 자주국방의 의식을 더욱 고취시켰다. 또한 中東국가 및 동남아 국가들의 무기 수요 유발 및 방위산업 능력을 확대케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향후의 우리의 군사력 건설 중점분야도 현재의 재래식 무기의 大구경화, 사거리 연장, 射統장비의 정밀성 제고 등 성능개량과 C'I, 전자무기,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개발에 집중 투자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방산업체의 현재 능력은 어떠한가?

우리의 방위산업은 최초부터 민간업체 소유-민간업체 경영(Co-Co)체제로 발전되어 왔기때문에 모든 방산업체는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의 생산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방산업체의 총 매출액중 방산매출액의 점유 비율은 11%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는 우리 방산업체들이 민수부문사업에 다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84개 방산업체중 上位 10개 업체의 방산매출액은 전체 방산매출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 방산업체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상위 방산업체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투자 및 사업의욕은 민수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고, 피동적이다.

방산업체들은 '70년대와 같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산업정책상 한계가 있다. 방산업체들이 방산분야 투자에 망서림이 없이 민수/생산 공용기술(dual-use technology)을 식별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민수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방산분야에서도 튼튼한 기술기반을 구축할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방위산업을 국가 생존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란 인식을 갖고 방산업체들이 능동적인 경영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기체제의 수요는 국방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화될수 있으나, "방위산업의 사양화"란 있을수 없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재정비를 통한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정부는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의 내실화 및 군사기술기반 구축

1991 ~1992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향후 분야별 무기체제 확보방향은 차세대 소총, 화포, 탄약, 장갑차 및 전차의 성능개량, 초계함, 잠수함, 구축함, 지원기 및 전투기 등의 획득이며, 각종 유도무기, C'I 자동화체계 및 조기경보체제를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軍이 질 위주의 새로운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무기의 양적증강이 아니라 핵심기술을 동반한 고도 무기체제의 확보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무기체계를 성능 개량하려는 것이다. 재래식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사업과 국내개발 생산에는 첨단 전자광학기술, 컴퓨터기술 등의 확보와 신소재 및 신물질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방과학자들과 국방부의 정책담당자들은 현재의 국방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수행방식, 방산업체의 기술수준 등으로는 새

로운 기술 및 무기체계의 개발/생산이 곤란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의 방산업체들의 기술수준은 자체 연구개발을 하기에는 연구인력, 시설 및 투자예산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의 주요 핵심 구성품 및 부품들은 주로 미국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국내 조달계약중에서 46%를 해외 부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무기개발 생산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이 결여되어 있고, 종합적인 획득계획 없이 개별 무기 사업별로 단기적인 획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방산업체들은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외국 무기체계의 손쉬운 조립이나 공동생산에 더 관심을 가져 왔으며, 구성품이나 부품의 개발에는 거의 흥미가 없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수 있는 정부차원의 국산화 개발지원제도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문계열화 작업을 수차 시도하였고, 부분적인 업체간의 갈등요인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구성품 및 부품수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취약하고 주계약업체(대기업)들간의 기존 중복투자로 인해, 사실상 전문계열화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말에 확

정된 軍 항공기 분야 전문계열화 조정도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대한항공간의 서로 다른 인식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을 내실화하는 길은 무엇인가?

방위산업의 특성상 이것은 정부와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현재의 방위산업 당면과제를 「강 건너 불 보듯이」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첫째, 현재 방산구조 및 기술수준을 철저히 분석·진단하여, Zero Base에서 향후 중점육성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해외의존도와 민수분야와의 연계정도 등을 무기체계별로 검토하여 분명한 방위산업 육성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향후 획득 예정인 무기체계에 대한 필요기술과 우리가 확보해야 할 기반군사기술들을 무기체계별로 식별 종합하여 중장기적 확보목표와 구체적 획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많은 무기체계를 해외 직구매, 공동생산 또는 국내개발을 통해 획득하였으나 체계적인 획득을 하지 못하였다.

防産 구조 설계시 전략적 선택

자급자족 목 표							해 외 상호의존
▲ 전략무기 (원자탄)	▲ 군전용 전 자	▲ 주 요 재래식무기	▲ 전자기구성품	▲ 탄 약	▲ 트럭, 지원장비	▲ 원부자재	
군 직접 운용(Arsenal)							민간운영
▲ 전략무기	▲ 탄 약	▲ 군전용 전자부품	▲ 주 요 재래식무기	▲ 전자기구성품	▲ 트럭, 지원장비	▲ 원부자재	

현재와 같은 단위 무기체계별 획득전략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모든것을 국내 방위산업 및 군사기술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군사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군 전투기 사업(KFP), UH-60 기술도입생산, 경헬기 기술도입생산, 155미리 자주포 성능개량, 한국형 전차 K-1의 성능개량 등 모든 무기체계 획득에서 우리의 군사기술 목표를 잘 설정하고, 정부, 업체, 연구기관이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KFP 사업이 끝나는 1999년 우리의 항공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의 45.3%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KFP사업을 통해 항공기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획득기술 관리체계(주관부서)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10억불을 더 투자하여 면허생산을 하고 자했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상공부, 그리고 KFP 참여업체들의 종합전략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방산업체들이 향후의 고도무기체계 개발 생산에 대처하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방부)가 우선 3,000억원정도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현재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대폭 탈피하여 민수/생산 공용기술이 많다고 판단되는 무기체계 개발에는 방산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할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방위산업이 튼튼한 구조를 갖추고 자생력을 그나마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술이 업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정 전략무기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서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수준의 방산업체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체제를 계속할수 있을 것인가?

업체가 약간 기술적으로 미흡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생리상 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경제적으로 더 짧은 기간에 만들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의 DARPA와 같은 역할을 맡고,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방산업체에서 개발 생산할수 있도록 체제가 정립되어야 군사기술기반이 구축되고, 우리의 방위산업이 내실화될수 있다.

방위산업 국제협력

우리의 방위산업이 선진 군사기술을 습득하고 제한된 국내수요의 부족에 따른 해외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방산제품은 미국의 수출통제 및 무기수출시장의 경쟁력 심화로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마땅한 수출대상장비도 없는 실정이다.

기술도입생산 및 절충교역 협상시 핵심군사기술 및 국내 생산 필요품목의 체계적 협상 및 획득이 미흡하다. 이는 외국업체 주도로 이전기술과 품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수준, 생산구조, 성능개량 등의 정보가不在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활발한 활동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나라들과의 방산협력 협정이 체결되고 있고, 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업체간 교환 방문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방산국제협력은 방산업체의 튼튼한 기술기반과 능력을 전제로 활성화될수 있으나, 우리 방산업체들의 기술수준 및 생산품목 등의 능력 미흡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방산국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필수 구비사항을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

방위산업이 튼튼한 구조를 갖추고 자생력을 그나마라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술이 업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정 전략무기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서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

첫째, 해외 무기정보 획득체계 구축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가격, 기술, 형상, 하도급 생산구조, 절충교역 실적,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하여 정보화하며, 이들을 분석하고 유통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추진의 체계화

中·長期 국제협력목표와 방향을 국가별, 무기체계별로 수립하고, 정부와 업체의 통합적 추진체제가 구성되어야 하며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된 해외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추진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방산업체들이 무기체계 소요제기, 획득, 기술정보에 적극 참여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산업체들이 능동적으로 해외협력에 참여하고, 절충교역을 잘 이용하면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얻을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업체의 결집화된 국제협력이 추진되어야 방위산업의 경영기반이 튼튼해질수 있다.

해외 무기체계 정보획득 관리체계, 그리고 체계적인 절충전략 수립 등을 국과연의 기술정보센터와 국방연구원의 무기체계연구센터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무기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적 방산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방산 국제협력의 다변화는 특정국가에 대한 기술의존을 줄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획득과 해외수출시장의 공동협력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을 정책의 최우선으

로 두되, 유럽 및 기타 국가와는 특성별로 협력범위 및 내용을 다양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최근 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방위산업이 규모를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등 구조재편의 추세에 있다. 우리의 경우도 국방예산의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무기체계 수요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향후 안보현실을 고려할때 방위산업의 기반구축과 필수 군사기술의 제한 충분적 능력확보는 국가생존상 필수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의 방산업체들은 지금까지의 피동적인 방위산업 경영에서 탈피하고, 미래에 발생할 막대한 新무기소요에 대비할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할 시기」라고 본다. 특히 민수/군사 공용기술에 대한 식별을 하여 방산기술을 민수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소요부서인 국방부의 업무로만 인식하지 말고, 국방예산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방산투자가 국가 첨단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국방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기처 등의 유관부처가 총체적인 육성을 할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해외구매가격보다 수십배의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국내개발을 통해 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군사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군사적 잠재역량의 확보와 첨단군사기술의 민수산업 활용 연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한 당면과제가 확실히 부각된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방위산업이 재도약할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